

제 6 부 요약과 결론

제 15 장 기존문헌의 주요 장기에측 정리 이지선 · 배진석 /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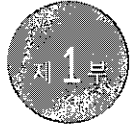
1. 성장률과 시장규모 / 291
2. 1인당 국민소득 / 292
3.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 292
4. 장기 인구추세 / 293
5.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 293
6. 도시화 / 294

제 16 장 2020년 중국경제 11대 예측과 중국리스크의 종합평가 . 이 근 / 295

1. 2020년 중국경제 11대 예측 / 295
2. 중국리스크의 중장기 평가 / 309
3. 한국에 대한 시사 / 311

▪ 참고문헌 313

▪ 필자약력 333



중국리스크 분석의 배경과 분석틀

제 1 장 중국리스크 분석의 배경
이 근 · 김병국 · 배진석

제 2 장 분석의 틀과 주요쟁점
이 근

거시적 안정성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얽혀있는 글로벌 불균형(미국의 쌍둥이적자와 중국의 대미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하는 측면도 포함된다.

둘째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성장이 중국 내 최대 인구집단인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 증가를 보장하고 도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런 과정이 환경이나 에너지 조건과 양립될 수 있는가 하는 성장의 근본적 지속가능성의 리스크가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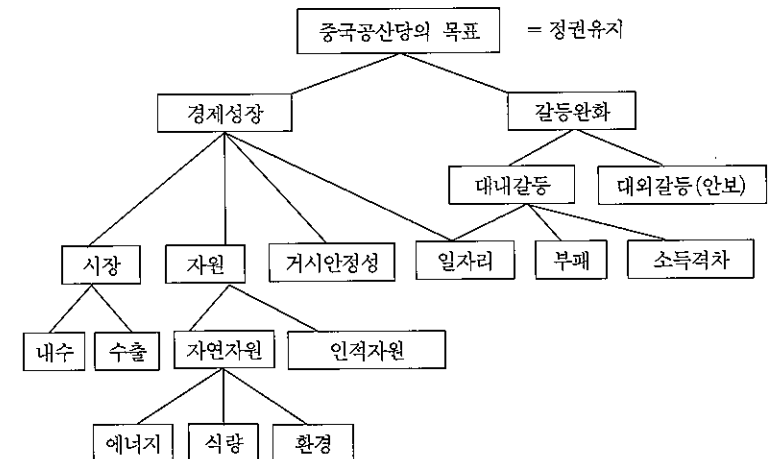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이런 중국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 2 장 분석의 틀과 주요쟁점

이 글

이 책에서는 ‘중국사회경제’의 분석을 위해 일관된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림 2-1>과 같은 틀을 상정한다.

<그림 2-1> 중국사회경제 장기전망과 분석틀



• 성장전략의 특성과 선택 (3대 성장전략)

- ①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 첨단기술집약적 / 서비스산업
- ② 외국자본 주도 / 국내자본 주도
- ③ 수출 주도 / 내수 주도

1. 중국공산당 및 현 지도부의 목적함수: 체제안정 및 유지

우리는 우선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 즉 목적함수는 현 정권의 유지라고 상정한다. 가령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권유지라는 상위목적에 봉사하는 하위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이 무조건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확대되는 도농, 계층, 지역격차에 대비하여 성장속도를 줄여서라도 잠재적 체제 불안정 요인을 줄이는 균형성장론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1970년대 후반 중국은 다른 강대국 및 주변국에 비해 경제력이 뒤쳐지는 것에 대해 체면이 안 선다는 생각과 빨리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추격에 대한 부담이 강했다. 즉, 주변의 작은 나라들인 한국과 대만에도 뒤진다는 현실은 바로 정권안보에도 좋지 않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덩샤오핑(鄧小平)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경제개혁도 체제안정이라는 상위목적에 대한 수단적 의미로 선택된 것이다.

2. 2개의 하위목표: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갈등완화

정권유지라는 상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로 밑의 하위목표로 경제 성장과 갈등완화를 상정할 수 있다. 체제 및 정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어느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역대 중원을 장악하고 중국을 통치한 어느 정권에게도 지구상 최대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든 중국정권은 이런 인구압박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1978년 이래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최대 집단인 농민들을 개혁의 수혜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집단농업을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돌려줌으로써 가족농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에도 백성들의 정치적 선호를 십분 고려하였다. 이는 중국정권이 경제성장과 정치적 갈등 축소(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추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갈등완화라는 두 개의 목표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면, 경제성장이 일차적으로 더 중요하고 갈등완화는 성장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인다는 정도의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대내외 갈등완화: 평화노선, 소득격차, 부정부패

1) 경제 중시의 평화외교 노선

갈등에는 국제적 갈등과 대내적 갈등이 있다. 국제적 갈등은 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개혁과 개방이라는 것도 사실상 강대국 및 주변국과의 경제격차를 줄여서 정권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으므로, 외교를 통해 대외적 갈등을 줄이는 것도 사실상 중국이 추격할 때까지 경제성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당분간은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과의 대결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다.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도 국경 분쟁을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미국과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야말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안전망이자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대화 건설 대신에 반미, 반패권주의 투쟁을 외교정책의 수위에 놓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은 장쩌민(江澤民)을 거쳐 후진타오 정부로까지 계승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교방침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을 가진다. 실질 방위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는 해도(Bernstein and Munro, 1997; 김재관, 2003), 일단 중국의 군사력 자체가 미국에 비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승산 없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교방침은 1990년 이후 진행된 중미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중국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1995년 대만의 리덩후

이(李登輝) 방미사건, 1995~1996년 대만위기, 1996년 미일 신안보지침, 1999년 주 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 2001년 미국 경찰기 충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 내 군부강경파가 득세할 조짐이 보이는 등 중미관계가 일시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전반적인 대미 중시 외교노선은 일관되게 견지되었다.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중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2년 3월 탕야우밍(湯耀明) 대만 국방부장관이 외교단절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2002년 9월 캉닝샹(康寧祥) 대만 국방부차관이 23년 만에 미국 국방부 건물에 들어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미국이 2002년 6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에도 강경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2년 11월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이라크 사찰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이장훈, 2004).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다자주의를 전략적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Wang, 2000; Goldstein, 2001),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중국은 미국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Medeiros and Fravel, 2003). 일단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미국에 어느 정도 협력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소득격차 관리: 대내 갈등요인 I

중국정부는 대내 갈등의 완화를 위해 ①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격차를 어느 수준 이하로 관리·유지하는 것, ②부정부패를 축소하는 것, ③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우선 소득격차 및 불균등성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서 기존문헌을 정리·검토·분석하였다. 불균등성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 모두 체제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2020년이라는 15년 이후의 시점을 전제로 한 장기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문헌을 정리·검토하고, 이 책만의 관점을 가지고자 하며, 잠정적 예측도 시도한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2020년까지도 세 가지 차원의 격차가 다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영(0)에서 일(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클수록 불평등을 표시하는 지니계수를 볼 때, 한국은 1990년대 말 0.29에서 최근 0.31로 상승하였고, 중국은 1988년 0.38에서 1995년 0.43을 거쳐 최근 0.45를 넘어서고 있으니, 중국의 분배악화 문제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중국은 0.4라는 위험수준을 이미 넘어섰지만 아직은 남미의 브라질(0.6), 멕시코(0.55) 보다는 나은 편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수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중국에서 소득격차 확대의 양상은 도시주민간 격차, 농촌주민간 격차, 도농주민간 격차 순으로 그 비중이 더 크다. 즉, 연해와 내륙지역 간의 격차도 있지만 내륙지역이라고 해서 균등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농촌과 도시 간에 오히려 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경제성장 초기에 농촌에 불완전 취업상태의 잉여인구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동안에는 도시의 상층 계층 소득만 먼저 상승하기에 분배가 악화된다. 그러나 이농이 완료되면 이주한 단순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다. 한국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성장기에 소득분배가 안정, 개선되었다.

그러면 중국도 분배개선 단계로 이행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상당기간 그렇지 못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 잉여노동력 규모는 1억 7천만 명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크기에, 2020년의 도시화율을 현재의 40%

에서 60%로 올려잡아도 그 잉여인구를 도시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1억 명 내외가 계속 잉여인구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사회적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알기에 현 중국정부도 미리 손을 쓰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도 가장 잘 사는 지역인 동부연해 지역만 보면 대도시의 이농인구 흡수력이 강해 분배가 개선됐지만, 중서부는 잉여인구 규모도 크고 도시도 적기에 분배가 악화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절대빈곤 축소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내었다. 절대빈곤층은 중국기준으로 1980년대 인구의 10% 이상에서 최근 약 3% 밑으로 감소해, 3천만 명으로 줄었다. 국제기준으로도 인도는 전체 인구의 30% 가까운 약 3억 명 정도가 절대빈곤층인 것에 비해, 중국은 인구의 10% 내외 혹은 1억 명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최하층 소득의 절대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개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도 이런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고성장이라는 면에서는 동아시아 유형이고, 절대빈곤 축소를 동반한 분배악화라는 면에서는 남미유형이다. 향후 중국의 불평등 문제 및 체제안정과 관련해서는 악화가 뻤한 전반적 분배정도보다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가 혹은 양극화가 심화되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3) 부정부패와 일자리 : 대내 갈등요인 II

부정부패는 그동안의 많은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당독재라는 기본전제 아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마련이고, 부정부패의 주체인 공산당이 스스로를 개혁하기에는 한

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부패 문제는 향후에도 민주화가 되지 않고 중국공산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괴롭히며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체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첫 번째 채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부(國富)는 국민들이 경제성장과정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농촌에 과잉 잉여인구가 존재하는 한편, 도시에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대략 10% 내외의 실업률이 나올 정도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4. 경제성장의 네 가지 제약요인: 시장, 자원, 일자리, 거시안정성

경제성장은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기본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판매로 이뤄진다. 생산에는 자원이 소요된다는 면에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가와 조달 가능한가의 여부가 경제성장의 일차적 제약요인이다. 또한 생산된 상품이 팔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요의 크기, 즉 시장의 크기도 주요한 제약요인이다.

그런데 생산과 판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기업을 넘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산과 판매 그 이상의 것이다. 즉,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제약요인은 첫째, 경제활동의 결과 그 나라에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둘째, 이 과정이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고 파국이나 위기로 빠지지 않는 일정 수준의 거시적 안정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자원, 시장, 일자리, 거시 안정성이라는 네 가지 제약요인에 관해 정리·분석한다.

1) 거시 안정성 : 재정적자, 금융위기, 글로벌 불균형

거시 안정성이란, 가령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같이, 어떤 한 나라 경제 전체가 파국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불황과 호황 사이에 부침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국가재정의 안정성, 부실채권 등 금융적 안정성, 국제경제와 관련한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검토된다. 이 중에서도 GDP 대비 6%라는 기록적 수준에 달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이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채권 등을 구입해서 메워주는 상황을 상징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는 양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였다. 이 책 제8장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자세히 논의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절대량이나 GDP 대비 비율 면에서 역대 최고수준이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80%가량을 미국국채 등 각종 달러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감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 즉 미국에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달러자산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이 불균형 상태가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도시화와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루려고 하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자본손실을 보더라도 외환보유고를 증대하는 것이 이득이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되거나 수출부문이 해를 입지 않는 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국내소비를 줄이지 않고, 즉 상

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에서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들이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중미 양국은 제3자가 이 상태를 변화시키려 할 경우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민폐의 절상,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일본과 (또는) 유럽의 성장축진을 적절히 혼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인민폐를 절상할 경우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과거의 일본이 플라자합의 이후 겪은 것처럼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현재 구도 속에서는 상호공존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재의 균형은 매우 취약한 것이다.

2) 3대 자원 : 석유, 식량, 환경

이 책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인 중 자원 차원에서 석유, 식량, 환경이라는 세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첫째(석유), 중국이 향후 20년간 7%대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특히 석유자원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중국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7%대의 고성장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석유확보를 위한 중국의 필사적 노력이 공세적 석유확보전략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석유수입국들의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다(Toman, 2002; Downs, 2004). 상황을 건 석유수입국들의 경쟁은 기존 국제질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의 실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Ogutcu, 2003).

이 책은 중국의 석유자원 확보전략과 향후 전망에 관한 기존문헌을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20년간 중국이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석유가 필요하고, 국제 석유시장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에 따른 위기가 온다면 어떤 형태의 위기인가? 셋째,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변동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국정부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석유확보전략이 세계 제 1·2위 석유수입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상의 기초연구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책은 중국의 안정적 석유 확보전략이 ① 국제 석유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전략과 ② 독자적인 석유확보전략으로 대별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 석유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주요 석유수입국인 미국, 일본, EU 등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입국들과 함께 수요자 공동전략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공세적 해외유전 투자와 그 바탕이 되는 독자적 석유외교를 통해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이탈하느냐에 따라 향후 석유자원을 둘러싼 중미간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가 거대 석유수입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을 단순 경쟁관계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기서는 양국이 생산자 카르텔에 맞서 수요자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검토한다.

둘째(식량), 중국은 과연 13억의 인구를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199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면서, 식량문제는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주제가 되어왔다. Brown(1995)은 그의 책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에서 중국은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 그리고 경지면적 축소와 재배환경의 악화에 따른 공급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30년경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식량부족 현상은 수입량의 증가로 이어져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인상된 곡물가격에 따른 피해는 수입능력이 떨어지는 기타 개발도상국들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이 Brown을 주축으로 한 ‘중국 식량위기관자’들의 논거이다(Brown, 1995).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할 때, 중국의 식량수급 상황은 Brown이 우려했던 만큼의 식량위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중국의 곡물수요 급증으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도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자국 국민들을 기아상태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에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식량의 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형태의 변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다(Boland, 2000).

하지만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은 농업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산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중국의 식량자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근래에 들어 곡물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소득 증대라는 중국정부의 또 다른 정책목표는 식량수급 안정이라는 목표와 때로는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처럼 변화한 농업환경 속에서도 중국은 과연 목표하고 있는 식량수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역자유화 정책과 곡물산업 보호정책 사이에서 중국정부가 정책결정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셋째(환경),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도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에 도전이 되고 있다. 대규모의 도시화가 이뤄지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애초부터 안고 있는 물부족과 물오염의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시거주자 1인당 물 소비는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200% 증가하였고, 산업용수 소비도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그 결과 중국국민 가운데 6천만 명 이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확보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40개에 달하는 주요 도시들이 고질적인 물부족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적 수자원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되어 수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 내내 거의 모든 중국의 하천에서 수질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염된 하천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염된 수자원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 전세계 차원의 환경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수자원 고갈과 오염의 문제를 악화시켜온 경제성장은 다른 한편으로, 공기 중에 다양한 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세계 기후변화를 가속화함은 물론 호흡기 질병도 확산시키고 산성비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토지자원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국토의 4분의 1 정도가 사막화된 상황에서 환경오염은 중국의 더 많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토의 40%가 침식되고,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는 기류를 타고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으로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위하여 어떻게 환경친화적 경제체제를 형성할 것인가를 몇 가지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가령,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시 이농을 점진적으로 더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과 에너지 등의 자원을 소비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너무 급속한 도시화는 이런 환경자원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화와 현금작물로의 다각화는 농민의 살충제 사용과 가축으로 인한 폐기물을 급격히 증가시켜 환경자원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

3) 시장 : 중산층, 시장개방, 미국시장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을 사줘야 할 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첫째, 중국 내수시장 자체의 크기와 안정성을 보기 위해 중산층의 크기를 검토한다. 둘째, 중국시장을 놓고 결국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경쟁한다는 점에서, 중국시장의 개방정도에 대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지적재산권, 금융, 건설 등)으로 나누어 기존문헌을 검토·정리한다. 셋째, 중국의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기대한 만큼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첫째, 내수시장의 크기와 중산층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개혁 이후 20년 사이에 중국 중산층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미국이 서유럽국가에 비해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는 상·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 즉 중산층의 소득비중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점이 미국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중산층이 전체 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은 1980년대 말 55%까지 되었다가 현재는 45%로 떨어져 미국과 달리 중산층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2002년 WTO 가입시에 중국이 약속한 각종 시장개방조치와 관련하여 그 이행 정도를 분석·정리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영업지역제한 해제 등 시장개방 약속을 상당한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석유정제, 건설 등 주요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및 영업 제한은 2008년 이전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제한부분은 향후 계속적으로 외국과의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개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의 경제성장에 무역, 특히 중미 무역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시장의 역할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소비가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곳에서 수요를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해외상품에 대한 미국의 지칠 줄 모르는 소비력이 중국상품 수요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중미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는 양국간 무역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미간 무역흐름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조정이 없는 한, 향후 중미간에 끊임없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미국시장 의존도, 미국과 외국의 무역분쟁 사례(특히 일본 사례), 그리고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가능한 시나리오들 및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분석하여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내수나 다른 대외시장이 커져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향후 중미 무역관계의 조정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WTO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양자간 협상구도로 갈 것이냐, 그리고 각각의 경우 어떤 양상을 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4) 일자리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소득보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우선 도시주민들이 실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농촌의 일자리가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생산성 문제) 하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도록 하겠다. 농촌, 농민, 농업이라고 하는 소위 삼농(三農) 문제는 중국 정부의 최대 경제난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 농민 중 약 1억 5천만~1억 7천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도 농업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완전고용 내지 과잉인구 문제가 그 핵심이다. 이는 농업생산성이 낮아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입이 도시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워낙 낮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낮아 농민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농민소득 증대의 궁극적 방안은 2억 명 가량의 농촌 과잉인구를 도시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호구제를 완화하면서 도시로의 이농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도시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무작정 허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 없는 이농의 결과는 도시 빈민화이고, 이는 중국이 다른 자본주의 제3세계 국가의 전철을 똑같이 밟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도시의 실질실업률은 10%이며, 특히 199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한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GDP 1%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은 1980년대 말에 0.3%였으나 지금은 그 3분의 1인 0.1%이다. 한마디로 1990년대 10년 동안 경제규모는 90% 이상 커졌지만, 일자리 증가로 보면 10% 증가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중국이 개방 후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다른 나라와 경쟁하다 보니 자꾸 첨단산업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똑같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딜레마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농을 허용하는 것과 도시 실업증대 사이의 딜레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 없는 성장 사이의 딜레마이다. 1990년대까지의 성장이 도시화 억제 - 높은 저축률 - 고투자 - 고성장 -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이들간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어, '도시화를 허용해서 소비를 촉진해 볼까,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일자리 및 소득분배를 개선해 볼까' 하는 온갖 정책 딜레마에 빠져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강도를 더해가며 중국경제의 목을 쥔 것이다. 결국 지구 최대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문제로부터 21세기의 중국정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대응은 농촌 과잉인구의 대도시 유입보다는 중소도시 건설이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육성이다. 문제는 중소도시 건설을 추진할 만큼 재원이 충분한가의 여부와 서비스업은 결국 대도시에서 발달한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위의 문제들을 분석해야 알 수 있다.

5. 세 가지 성장전략 사이의 선택:

노동 대 자본, 외자 대 내자, 수출 대 내수

위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시장과 자원이라는 면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합해 보면 중국은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성장전략과 관련된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내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사이의 선택이다. 달리 보면 제조업 대 서비스 주도 성장 사이의 선택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세계시장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수요를 찾아 경쟁하다 보니 기술집약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되고, 그 결과 제조업이 창출하는 고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런 경향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은 제조업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는 서비스업이 훨씬 크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사이의 새로운 균형달성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자본 대 토착기업 사이의 딜레마다. 그동안 중국은 개방 초기부터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속성장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장은 개방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달리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었다. 즉, 과거 한국은 외국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한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소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외국지분이 100%인 투자도 적극 수용하였다. 따라서 자국 내에 다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 때문에 내수시장에서나 해외시장에서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다(Lee, Lin and Chang, 2005). 그러자 중국 내에서 “외국인 기업 때문에 중국기업이 다 죽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대부분의 가전부문에 중국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도 많았지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전자레인지, 전화교환기 등에서 중국기업들이 다국적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중국의 TV 시장에는 소니와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창홍이나 TCL이 있고, 컴퓨터에는 IBM의 하청기업으로 시작하여 IBM PC 부문을 인수한 리엔상(Lenovo) 등이 있고, 냉장고시장에는 세계 최대의 냉장고 회사인 하이얼(Haier)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다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휴대폰시장을 예로 들면 토착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한때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아주 최근에는 하락하면서 다시 외자기업들이 시장을 탈환하고 있다. 2004년 NOKIA의 시장점유율은 전해 대비 1.53% 올라가 22.0%를 점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에 반해 중국기업은 다국적기업에 짓눌려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오(波導)의 시장점유율이 전해 대비 0.51% 내려가 6.1%를 점했고, TCL이 0.47% 내려가 3.1%를 점했으며 샤신(夏新)이 0.08% 내려가 3.9%를 점했다. 총체적으로 2004년 휴대폰 토착기업의 시장점유율은 41.2%밖에 차지하지 못해 한때의 고점인 60%와 대비된다. 2005년에는 더욱 하강하여 제1분기에는 39.6%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제2분기에는 38.3%까지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공업 총 생산액이 중국 전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80.5%에서 2003년의 68.82%로 줄어든 데 반해, 외자기업은 1995년의 19.5%에서 2003년의 31.18%로 늘어났다. 또한 외자기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홍콩, 대만, 마카오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특히 1999년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음), 그 외(주로 선진국)의 비중이 커졌다. 이런 최근의 외자기업의 약진은 토착기업의 한계를 시사한다. 즉, 중국 토착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핵심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 원가는 높고 품질은 떨어지며 혁신속도가 늦어서 소비자의 수요를 제때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5중 전회)는 11차 5개년 기간의 경제에 대한 6대 원칙 중의 하나로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를, 7대 목표 중의 하나로 세계적 대기기업의 육성을 선정했다. 이는 중국이 외자유치 정책을 계속하면서도 토착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오히려 외국기업에 의한 시장독점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반독점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경제 관련 중요쟁점 중의 하나이다.

셋째, 내수 대 수출의 선택이다. 오늘날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이라는 시장개방의 파고를 무사히 넘기고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러나 3년 전 50%를 맴돌던 무역의존도, 즉 수출입 총액 대 GDP 비율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한 적이 있다. 물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비율이 100%를 넘기도 하지만 미국, 일본과 같은 대국은 20%가 안 된다. 대외의존도의 상승은 무역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어떤 취약성인가? 바로 내수부족이다.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된 중국이 목마르게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산 제품을 사줄 시장이며, 내수가 아직도 취약하니 대국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든 수출이든 수요가 조금만 부족하면, 중국경제는 공급과잉 발생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바로 이 내수회복과 균형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수부진의 한 원인이 삼농(농촌, 농민, 농업) 문제라고 보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관련 조세를 철폐하였으나, 농민은 지방 당 관료들의 준조세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각종 농민소요가 빈발하고 있다. 농민소득 증대의 궁극적 방안은 2억 명 가량의 농촌 과잉인구를 도시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농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도시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무작정 허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경제성장 메커니즘과 선택의 딜레마

제 3 장 도시화를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이지선 · 이 근

제 4 장 농촌과 농민도 잘살 수 있을 것인가
이지선 · 이 근

제 5 장 도시 실업문제를 서비스산업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지선 · 이 근